

올바른 내 개혁과 혁신을 위한 호 소 문

2021. 6

※ 건의처 :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내 개혁과 혁신은 해야 합니다. 단, 지역참여·합리성·원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혁신도시는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이다. 지방의 혁신도시 내에 보금자리를 튼 공공기관들은 지역경제의 젖줄이자 미래 성장동력의 초석으로써 역할을 수행해 왔다.

경상남도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대 공기업 LH도 진주혁신도시를 대표함은 물론 전 세계에서 손꼽는 토탈 시스템을 갖춘 국토개발 전문기관으로, 설립 이후 국토균형개발과 국민의 거주환경 제공을 위해 많은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거대한 조직과 정보 독점,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의 문제로 토지 투기의혹이 불거져 공공부문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고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

정부는 이를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해체수준의 개혁을 예고하고 빠르게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근간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경영은 투명해야 하고, 공직운리는 엄중해야 하기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LH 개혁과 혁신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경남지역 상공인들도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 구축, 퇴직자 전관예우와 갑질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LH의 방만경영 개선 및 엄정한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 환수’ 라는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개혁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해 이견이 없다.

하지만 기능 조정과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현재 1만명 수준인 LH 직원을 20% 이상 감축하겠다는 등의 방안은 공감하기 힘들다.

이러한 정부의 혁신방안들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절차적 과정에서 지역 의견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꾸렸는데, 혁신도시 정책은 지역과 긴밀하게 협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역참여는 전혀 없었고 향후에도 이런 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정책입안 과정에서 지역이 소외되거나 외면당하지 않는 가운데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진주혁신도시는 과거 국토개발 과정에서 소외되어온 서부경남권인 진주에 LH가 자리잡음으로써 이루어낸 국가균형발전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LH는 진주혁신도시의 상징과도 같으며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더욱이 미래세대인 지역 인재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기에 분할이 이루어진다면, 인재 이탈을 초래해 지역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LH 분할이 단초가 되어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조성목적과 취지, 원칙이 무시된 채 ‘쪼개기 공공기관’으로 정치화되거나, 지역갈등이 유발되고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선불리 추진된 LH 분할은 혁신도시의 설립취지인 균형발전 원칙에도 벗어나며 그 피해 또한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조직과 기능의 축소 및 이관은 부처별 칸막이로 인한 경영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고, 인력감축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향후 수년간 청년들의 일자리를 앗아갈 뿐이다.

무엇보다 진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에 결정적인 직격탄이 될 것이고 소상공인들은 절벽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더불어 분리·이관 되는 기능과 부처 유치를 위한 지역간 불필요한 경쟁으로 사회적 소모와 갈등도 심화할 것이다.

상처는 곪기 전에 치유해야 하지만 곪은 곳이 있다면 그 부분을 치유하면 된다. 작은 상처 때문에 큰 수술을 하거나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명의의 처방이 아니다. 비위가 있을 때마다 모든 공공기관을 분할하는 극단의 조치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다.

지금 기업인들은 수년째 발생한 여러 대내외적 악재로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때이다.

이에 혁신도시 완성을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LH 혁신안이 마련되기를 지역상공인들은 간절히 호소한다.

2021년 6월 10일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천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이영춘

통영상공회의소 회장 이상석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서희영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박병대

김해상공회의소 회장 박명진

밀양상공회의소 회장 손영준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박제출

거제상공회의소 회장 김환중